

프랑스, 대통령 선거 최종 후보의 주요 노동 및 사회 정책 비교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프랑스

이두형 (프랑스 루미에르 리옹2대학교 사회학 박사과정)

■ 머리말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2022년 4월 24일 치러진 프랑스 대선 2차 결선 투표 결과 58.55%의 표를 확보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이로써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002년 자크 시라크에 이어 약 20년 만에 재집권에 성공한 대통령이 됐다.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2차 결선 최종 후보에 오른 프랑스 극우의 상징적 인물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후보는 득표율 41.45%를 기록하며 지난 2017년 대선에 이어 또 다시 마크롱 대통령에 맞서 고배를 마셨다.¹⁾

비록 대권 도전에 실패했지만 올해 대선에서 르펜 후보의 약진은 두드러졌다. 지난 2017년 대선 2차 결선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66.10%를 기록하며 33.90%에 머문 르펜 후보를 두 배 가까운 격차를 보이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그 차이가 현격히 줄어들었다.²⁾ 또한 1차 결선 투표에서 7.07%로 4위를 기록한 극우 성향의 에릭 제무르 “재정복!(Reconquête!)” 후보와 2.06%의 표를 얻은 민족주의 성향의 니콜라 뒤퐁-애냥 “약진하는 프랑스당(DLF)” 후보만이 2차 결선 투표에서 르펜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반면 21.95% 득표율로 3위에 그친 좌파 성향의 장-뤽 멜랑송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당(LFI)” 후

1) Ministère d'intérieur, “Élection présidentielle 2022”, 2022.4.24.

2) Ministère d'intérieur, “Résultats de l'élection présidentielle 2017”, 2017.4.23.

보 등 상당수는 극우의 정권 창출만은 막아야 한다며 르펜 후보에게만큼은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유권자에게 당부했다.³⁾ 1차 결선에서 르펜 후보가 얻은 표(23.15%)와 2차 결선에서 지지를 선언한 후보들의 득표율을 합치면 약 32%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2차 결선 투표에서 르펜 후보가 그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선거를 단순한 합산으로 계산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번 대선에서 르펜 후보가 괄목할 만한 결과를 거둔 것은 극우 세력의 성장으로만 보기 어려운 맥락이 반영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리한 정치역학 속에서도 르펜 후보는 어떻게 눈에 띄는 지지를 얻을 수 있었는지, 또 마크롱 대통령이 그럼에도 어떻게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두 후보 각각이 제시한 노동 및 사회 정책을 통해 살펴보겠다. 두 후보의 대선공약은 일부 공유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 명확하게 대립하는 관점을 보이기도 한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향후 프랑스의 노동 환경을 엿볼 수 있는 지점을 제공한다. 이 글은 마크롱 대통령⁴⁾과 르펜 후보⁵⁾의 대선 공보물과 언론 기사 등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 은퇴연금 개혁

두 후보 모두 자유주의 관점의 경제정책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기본 기초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은퇴연금 개혁 측면에서는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은퇴연금 개혁은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임기 내 추진한 역점사업 중 하나였다. 비록 철도(SNCF)노조의 파업 등 강한 사회적 반발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현재 은퇴연금 시스템 개정 논의가 중단됐지만 이번 대선 정국에서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은퇴연금 안건에서 가장 첨예한 시각 차를 보이는 것은 법정 은퇴연령에 대한 입장이다. 우선 마크롱 대통령은 현행 62세인 법정 은퇴 시점을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L'Obs, "Pécresse, Jadot, Roussel et Hidalgo appellent à voter Macron pour faire barrage à Le Pen", 2022.4.11.

4) 마크롱 대통령 후보 공보물(2022), <https://www.cncep.fr/> (2022.4.14).

5) 마린 르펜 대통령 후보 공보물(2022), <https://www.cncep.fr/> (2022.4.14).

마크롱 대통령이 제안한 은퇴연령 상향안은 약 9년에 걸쳐 매년 은퇴연금 납입기간을 4개월 씩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즉 현재 62세인 법정 은퇴 시점을 2022년부터 매년 4개월가 량 늦춰 2030년에 이르러 65세까지 올리는 방식이다.

이와 반대로 르펜 후보는 은퇴 시점을 60세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다. 다만 핵심은 노동 시작 연령과 은퇴연금 납입 기간에 따른 은퇴연령 차별적용이다. 즉 17~20세부터 노동을 시작해 40년의 근속연수를 갖춘 경우 60세부터 은퇴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20~24.5세부터 노동을 시작한 경우 60.75~62세에 은퇴연금을 전액 보장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24.5세를 넘어선 경우는 기존 방식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은퇴연금 개혁에 매년 96억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르펜 후보는 “이른 시기에 하는 노동은 상대적으로 더 고된 육체 노동에 집중되며, 늦은 시기에 노동을 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육체적으로 덜 힘든 지식 노동인 경우가 많다.”라며 “이에 따라 일찍 노동시장에 진입한 경우 은퇴도 더 빨리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해당 방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⁶⁾

은퇴연령 조정과 관련해 마크롱 대통령은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은퇴연령을 상향한다는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65세로 얼마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1차 선거 다음 날인 2022년 4월 11일, 마크롱 대통령은 “만약 시민들이 큰 불안을 느낀다면 2030년까지 개혁을 완수하고자 밀어부치지 않을 것”이라며 “은퇴연령 65세는 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은퇴연령 상향 조정을 2027년에 마무리하는 것을 언급하며 기존 65세에서 64세로 낮춘 선에서 조정을 마무리하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2030년까지 은퇴 시점을 65세로 올리는 과정을 2027년경에 종료함으로써 은퇴연령 상향 조정을 64세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만약 내가 민중 선동가라면 ‘은퇴연령을 60세로 낮추자’고 말했을 것이다 ... 하지만 그렇다면 재정 부담은 누가 짊어질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은퇴연령 상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르펜 후보를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⁷⁾

6) L'internaute, “Programme de Marine Le Pen : retraiter, immigration, référendum... Le résumé des mesures”, 2022.4.15.

7) BFM TV, “Réforme des retraites : pour Emmanuel Macron, «les 65 ans ne sont pas un dogme»”, 2022.4.12.

■ 구매력 강화 정책

이번 대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가장 집중된 쟁점은 구매력 약화였다. 특히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촉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프랑스 서민들의 지갑을 급격히 얇게 만들었다. 프랑스 통계청(INSEE)은 2022년 4월 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8% 치솟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지난 1985년 이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다수 품목에서 물가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중에서도 에너지 부분이 26.5% 뛰어오르며 급격한 물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앞서 2022년 3월에 4.5% 증가한 데 이어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모양새다.⁸⁾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비용이 급격히 오른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프랑스 에너지 공급에 막대한 지분을 차지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벌이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물가는 올 4월에만 전년동기대비 26.5% 치솟았다. 2022년 식자재 물가 또한 3월 2.9% 증가한 데 이어 4월에는 3.8% 오르며 상승폭이 더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1차 선거 당일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60%가 선거 당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사회 이슈로 “구매력”을 꼽았다. 그 뒤를 이은 “사회 안전망”이 47%에 그친 것을 고려하면 이번 선거에서 구매력이 얼마나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는지 잘 드러난다.

르펜 후보가 마크롱 대통령을 턱 밑까지 쫓아왔다는 점에서 프랑스인들의 구매력 강화를 내세운 전략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조사에서 르펜 후보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의 72%가 가장 염두에 둔 것으로 “구매력”이라고 답한 반면, 마크롱 대통령을 지지한 유권자 중 “구매력”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한 비중은 49%에 그쳤다.⁹⁾ 실제 소득수준에 따라 지지 후보를 선택하는 데 차이가 있었다. 프랑스 월간 순소득 중앙값(2019년 기준 1,940 유로)¹⁰⁾ 근사치인 2천 유로보다 하위 소득을 기록한 유권자 중 28.5%가 르펜 후보에게 투표

8) Le Parisien, “Hausse de prix : l’inflation confirmée à 4,8% sur un an en avril, du jamais-vu depuis 1985 en France”, 2022.5.13.

9) CNEWS, “Sondage : le pouvoir d’achat est l’enjeu qui à le plus compte pour les français au moment du vote”, 2022.4.10.

10) La Dépêche, “Salaire médian, salaire moyen : c’est quoi la différence et où vous situez-vous par rapport aux autres?”, 2021.10.23.

한 반면 마크롱 대통령을 지지한 비율은 17.5%에 그쳤다. 반대로 월간 순소득이 2천 유로를 넘어선 경우 마크롱 대통령을 지지한 비율이 31.5%에 달했으나 르펜 후보에게 표를 던진 비율은 23%였다.

구매력 강화 이슈는 2차 결선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1차 결선에서 3위를 차지한 좌파 성향의 멜랑송 후보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 중 상당수가 구매력에 민감한 하위소득계층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성향이 정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표가 르펜 후보에게 갔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¹¹⁾ 2022년 4월 14일 공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차 투표에서 멜랑송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 중 35%는 2차 투표에서 마크롱을 찍겠다고 말했고, 27%는 르펜 후보에게 표를 줄 것이라고 답했다.¹²⁾

르펜 후보가 구매력 강화 공약에 힘을 실었다는 건 공보물에서도 잘 나타난다. 구매력 강화 내용을 가장 앞에서 다루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공약은 각 가정이 매월 평균 200유로가량의 추가 구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소비세를 줄인다는 내용이다. 가령 경유와 휘발유, 가스, 전기 등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직격탄을 맞은 에너지 소비세를 20%에서 5.5%로 대폭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더 나아가 르펜 후보는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휘발유 소비세 상승분을 폐기하고 100개에 달하는 생활필수품에 붙는 소비세도 없앨 것이라고 공약했다.

르펜 후보의 구매력 강화 전략은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30세 미만 노동자에게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30세 미만 창업주에게는 기업 경영에 따른 세금도 없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피고용인의 임금을 10% 올려주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사회보장제도 납입금 면제 등도 내세웠다.

반면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보물에서 구매력 향상에 관련한 내용은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명 “마크롱 보너스”를 대폭 상향하는 방안은 주목할 만하다. “마크롱 보너스”로 알려진 이 정책은 코로나19로 프랑스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은 지난 2019년 도입된 것으로 사용자가 피고용인에게 최대 1천 유로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소득세나 사

11) 20 minutes, “Présidentielle 2022 : Le pouvoir d’achat va-t-il monopoliser le second tour?”, 2022.4.13.

12) BFM TV, “Sondage BFM TV -Présidentielle : l’abstention gagne les électeurs de Mélenchon, le vote Le Pen en retrait”, 2022.4.13.

용자 부담 사회분담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제도로 2021년 약 400만 명이 평균 506유로의 혜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정부는 해당 제도를 2022년 3월 말까지 다시 시행했는데, 기존 1천 유로까지 지원되었던 금액을 50인 미만 고용 사업장, 노사 간 합의 등의 조건하에 2천 유로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확장했다.¹³⁾ 마크롱 대통령은 해당 시스템을 최대 6천 유로까지 올려 프랑스인들의 구매력을 더욱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¹⁴⁾

마크롱 대통령은 휘발유 등에 붙는 세금을 조정하는 등 적극 개입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비용 상승세에 급브레이크를 걸기보다 전반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관리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임을 내비쳤다. 반면 식료품 구매와 관련해서는 각 가정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식료품 구매 쿠폰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밝혔다. 또 프리랜서군과 관련해 이들의 임금이 최소한 최저임금(SMIC)에 미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연간 550유로의 세금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¹⁵⁾

■ 일자리 정책

앞서 살펴본 내용들은 결국 각 후보의 일자리 정책과 깊게 관련된다. 은퇴연금 개혁은 물론 구매력 향상을 위해 제시한 세금 감면과 지원 정책 등도 노동현장과 직결된다. 그럼에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두 후보의 정치적 성향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우선 르펜 후보의 경우 지금까지 꾸준히 주장해 온 이민정책 강화와 자국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대략적인 노동정책 방향을 알 수 있다. 가령 르펜 후보는 일자리 확보를 위해 프랑스 자국의 농업과 산업, 기업인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자국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함으로써 본인의 정치적 지향성을 명백하게 드러낸다.

반면 마크롱 대통령은 원론적으로는 완전고용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며 노동권과 노동 의무

13) Ministè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a relance, "La prime exceptionnelle de pouvoir d'achat", 2022.1.2.

14) Le Figaro, "Présidentielle 2022 : Emmanuel Macron promet de relever jusqu'à 6000 euros le plafond de la "prime Macron", 2022.4.3.

15) Le Figaro, "Pouvoir d'achat : que proposent Marine Le Pen et Emmanuel Macron?", 2022.4.7.

강화 등을 주창한다. 그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강화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 마크롱 대통령은 “장기 비소득자 정부지원금(RSA)” 지급 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RSA는 장기적으로 소득이 없는 실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주당 15~20시간 노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넘어 실제 고용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¹⁶⁾

어느 국가에서나 그렇듯 프랑스 대통령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들이 그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단적으로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도 우선 과제 중 하나로 내세웠던 은퇴연금 개혁도 여러 변수로 인해 현재로서는 담보 중이다. 또 은퇴연금 연령 상향과 관련해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며 내외 변수에 따라 다시 변동이 있을 여지도 있다.

무엇보다 르펜 후보를 위시한 극우 세력은 올해 대선에서 거둔 성과를 발판으로 오는 6월 예정된 총선에서 또 다른 기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2차 결선 후보를 내지 못한 좌파 진영도 총선 승리를 목표로 재결집에 나서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 대통령이 제시한 사회 정책들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대권만큼이나 국회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의 좌석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변수들에도 불구하고 마크롱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제시한 노동 및 사회 정책의 내용은 앞으로 프랑스 사회의 5년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반면 대권의 꿈은 좌절됐지만 유권자의 상당한 지지를 받은 르펜 후보의 공약은 현재 프랑스의 민심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 이는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막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한국이 사회 및 노동 정책을 강구함에 있어 참고할 사례라고 할 수 있다.

KLI

16) L'internaute, “Macron-Le Pen : sondages 2022, sondages 2017... Ce qui a changé!”, 2022.4.14.